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가시화

유단백을 포함하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유지방 등급 조정과 유단백 포함을 골자로 하는 3개 시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중순부터 연구용역 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여론수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각 안에 따르면 1안은 유지방등급을 15개에서 11개로 조정하고 현행 유지방 기준선 3.4%는 3.5%로 상향 조정, 상하한선은 3.1% 미만, 4.0%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유지방 등차가격 조정을 통해 절약된 인센티브를 유단백 인센티브로 돌려 유단백질 기준선 3.0% 미만을 설정하고 이 이상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특히 체세포·세균수에 대해서는 원유의 위생수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유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위등급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하위등급에 패널티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2안은 유지방 등급을 13개로 조정하고 유지방 상향조정과 상·하한선 조정의 세부 수치만 차이가 있을 뿐 1안과 동일하며 다만 체세포·세균수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안은 유지방 기준선을 유지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등급은 12개 등급으로 조정하고 하한선은 3.0% 미만, 4.0% 이상으로 조정하며 그 외의 내용은 1안과 동일하다.

이번에 마련된 세 개 안은 낙농진흥회가 지난해 4월 16일부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이사회는 3개 시안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각 안에 대해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이사회는 여론수렴 결과와 연구용역 기관의 추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3~4월 중 소위원회 논의와 이사회 심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과 적용 유예기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절과 무관...오히려 겨울이 더 위험할 수도

겨울에 발생한 이번 구제역을 두고, 전문가들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계절 또는 기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의 위험도는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인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은 "3~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던 것은 과거 국내 발생이 봄철에 집중됐던 까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이집트,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활동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겨울철이 구제역 위험에 더 놓이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 과장은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열에는 취약하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진다. 특히 소독 등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개칠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겨울이 구제역 취약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겨울에 바이러스가 생존해있다고 하더라도, 봄철에 다시 창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얼어서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풀리면 급속히 소멸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방역소를 가축농가에 사육제한 검토

소, 전염병인 구제역이 8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가축의 차단방역에 소홀해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한 농가에 일정 기간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과 생산자단체, 수의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구제역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최근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검토에 나섰다. 차단방역이란 가축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사육 가축이나 농장 종사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농장을 드나드는 사람, 차량 등을 소독하는 조치를 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방역 활동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니 8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일부 농가들의 방역에 대한 의식이 다소 느슨해진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도 가축의 질병 발생을 늦게 신고하면 살처분을 해도 보상금을 시가의 40~60% 수준으로 적게 준다. 구제역의 경우 수의사나 가축, 소유자 등이 구제역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방역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가축, 사람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돼지열병 등 전염성이 강한 악성 가축질병에 감염됐을 때 일정 기간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축산물의 소비가 줄고 가격이 떨어지는 등 산업 전체에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사육 농가는 반발할 수 있어 생산자단체, 전문가와 협의를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사육을 하려면 일정 기간 전문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을 일종의 면허제로 전환하는 셈이라며 “전염병 예방뿐 아니라 환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동물의 건강,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서도 가축 사육농가의 소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덴마크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 최소 3년6개월간 농업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0ha 이상 농지를 가지려면 18개월의 추가 직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종의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감염 대상이지만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슴, 염소 등으로 등록제를 확대해 모든 가축 사육업에 등록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소, 돼지, 닭, 오리 사육업만 등록 대상이다.

도축세 폐지, 헛구호 였나

새해 1월부터 도축세를 폐지하겠다고 정부와 국회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쳐 축산농가를 실망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나몰라라는 것에 대해 축산인들은 경악해 하면서 희망까지 앗아가 버리게 하고 있다며 망언자살 하고 있다.

정부는 소, 돼지를 도축할 때 부과되는 도축세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을 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지방세법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면서 축산인들에게 더욱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국회의 도축세 폐지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으로 축산인들의 생존 경쟁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현재 축산농가들은 도축세로 인해 연간 수백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을 뿐 아니라 납부된 도축세는 축산업발전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어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더욱이 정부가 지지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도축세를 폐지하려 했던 것은 한·미FTA와 한·EU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축산농가가 가장 크게 입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도축세가 폐지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는 줄어들지만 그 만큼 축산농가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도축세 폐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지방자치단체(도축장 소재 8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 세수를 메울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행안위에서 낮잠을 자는 동안 축산인들의 경쟁력은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국회는 알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축산인들은 공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축세가 지방재정

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0.15%에 불과하지만 이를 폐지할 경우 농가소득은 14.28%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과되고 있는 도축세는 고스란히 소비자가격 상승 원인으로 국내산 축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독 소와 돼지에 대해서만 도축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 어긋나는 것이고, 현재 무분별하게 늘어난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을 위해서도 도축세의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09년 농가가 부담한 도축세는 소 533억원, 돼지 286억원으로 총 533여억원으로 추산되며, 전 세계적으로 도축의뢰자가 도축세를 부담하는 사례는 없다.

산지 소값 '뚝'... 축산농 죽을 맛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인근 연천지역으로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소·돼지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1월 20일 서산시와 지역 축산농민들에 따르면 가축시장의 폐쇄로 거래가 전면 중단되자 판로가 막혀 불안감이 커진 농민들은 중간상인들에게 헐값에 소를 팔아 넘기는 실정이다.

소 출하시기를 놓친 서산의 한 농민은 "우시장에 소를 팔기 직전에 구제역이 터져 설 설 걱정이 태산"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5일마다 장이 열리는 서산시장은 150~200여 마리의 송아지가 거래됐으나 구제역 이후 거래가 중단되면서 소값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가락동 경매시장의 가격은 별 영향이 없지만 산지에서는 생체 1kg에 1만원을 넘던 것이 9000원대로 10%가량 하락했다.

주로 어린 소가 거래되고 있는 서산 우시장의 송아지 값은 대략 20~30% 떨어졌다. 서산가축시장의 6~7개월령 송아지 값은 지난해 9월 238만~244만원 하던 것이 작년 10월 230만원~257만원, 지난해 12월 223만~232만원에 이어 구제역 발생 전인 지난 7일 210만~238만원

대로 하락했다. 돼지값도 110kg에 34만원대에서 30만 8000~31만8000원대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농민들은 가축시장 개장이 늦어질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돼지를 사육하는 축산 농민들도 생산비를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울상을 짓고 있다.

생체 kg당 4000원은 받아야 하는데 3500~3600원에 출하돼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구제역 발생과 함께 충남도내 가축시장은 지난 11일 광천과 홍성 우시장을 시작으로 서산시 등 8개 시장이 모두 문을 닫았다.

충남도내에서 축산업 규모가 가장 큰 홍성군의 경우 가축시장 전면 폐쇄로 호가상 가격변동은 없으나 타 지역의 소값이 하락세를 보이자 축산농가들은 시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 홍성군지부에 따르면 전국 산지평균 육우 1kg 가격은 1월 19일 9846원으로, 18일 가격 1만930원에 비해 하루만에 9.9%나 떨어졌다.

1월 19일 전국 산지평균 한우 가격은 1만6553원으로 하루 전인 18일 1만7249원에 비해 4.0% 하락했다.

홍성의 한 축산농은 "시장이 문을 닫았으니 홍성에서 호가나 가격변동이 있을 리가 없다"면서도 "설은 가까워오는데, 가격하락이 뻘하고 실제 타 지방에서 이 같은 소식이 전해져 걱정만 커질 뿐"이라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가축시장을 열지 않을 계획"이라면서도 "축산물 수요가 많은 설 명절까지 외면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18일 신고된 구제역 의심증상 첫 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판정된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

(출처 : 축산신문, 농축산신문,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등)